

“꿀강의’ 팝니다” 광주·전남 대학가 ‘강의 암거래’ 기승

필수과목·인기강의 선점 사례 빈번
최고 10만원 거래... 학생 피해 속출
“학생 간절함 이용해 돈 버는 행위”
수강 희망자 비해 정원 부족 지적
대학 “방지 시스템 도입, 제재 검토”

개강을 맞은 광주·전남 대학가에 공공연하게 ‘강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인 전공 강의나 인기 강의에 수강신청이 몰리는 점을 악용해 자신에게 불필요한 강의를 선점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전남지역 대부분 대학의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끝난 10일 지역 대학 커뮤니티에 ‘팔아요’, ‘사요’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 강의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내

용의 게시글이 수십개가 게재돼 있다.

학점을 후하게 준다고 소문이 난 교수의 강의나 원격으로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등 속칭 ‘꿀강의’라고 불리는 인기가 많은 강의 판매 글에는 구매 의향을 밝히는 댓글이 이어졌다.

졸업을 위해서는 특정 전공필수 과목을 꼭 수강해야 한다며 애타게 판매자를 찾는 게시글도 줄을 이었다.

강의 거래는 대체로 1만원에서 5만원 이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인기가 많은 강의의 경우 10만원을 넘어서는 고가에 판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작 강의를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강의를 구입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강의 암거래’를 목격한 학생들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선 학교 측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재민(22)씨는 “수강신청 시기와 정정기간이 되면 대학 커뮤니티에 강의 거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더라”며 “강의를 거래하는 행위는 정상적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학교 측의 제재는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모(23)씨도 “개강 시기마다 커뮤니티에서 강의 매매가 반복되고 있다. 강의 판매는 타 학우의 간절함을 이용해 돈을 버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대놓고 강의 판매가 이뤄지는데도 학교 차원에서의 별다른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엄중하게 대응해야만 이러한 암거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학생들은 수강 희망자 대비 정원

이 턱없이 부족해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수민(20)씨는 “매 수강신청마다 대학가에서는 ‘클릭 전쟁’이 펼쳐진다. 전공 필수 강의 등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강의가 있음에도 수강 가능 인원의 제약이 있어 불편함이 있다”며 “강의 거래 행위는 1차적으로 학생들의 수요 대비 수강 가능 인원이 현저히 부족해 일어나는 행태인 만큼 강의 인원을 수요에 비례해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대 총학생회가 재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79명(33.8%)이 “강의 거래를 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대학교 관계자는 “학칙에 학생 간 수업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징

계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수업 수강내역 삭제, 수강신청 시스템 접속 강제 지연, 학점이월대상 제외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대학들은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강의 수요에 따라 수강인원을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주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강권 매매를 막기 위해 방지 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오는 10월 도입 예정이다. 이번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며 “수강권 매매 행위는 학칙에 명시된 징계 대상으로 타 학우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인지하고 지양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문 개방 공유문화 확산

지역민 대상 13개교 311면 무료
주차난 해소... 하반기 추가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공유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진흥 전담팀(TF)’ 활동 중 하나로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육진흥 전담팀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 균등 교육정책과 주요 민원을 자치구와 협력해 논의하는 기구다.

전담팀은 지난해 3월 서구를 시작으로 광산구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주차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북구 3개교, 서구 8개교, 광산구 2개교 등 총 13개교에서 학교 주차장 311면을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평일은 학교 업무가 끝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전후까지, 주말·공휴일은 24시간 문을 열어둔다.

단, 학생 안전과 학교현장 업무 부담 최소화, 학교 구성원의 의견 등을 최우선 반영해 추진하고, 이용자와 운영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 공유를 미리 신청·등록하도록 했다. 공유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으며, 장기 주차할 경

우 견인조치한다.

또 각 자치구에서 나눔주차장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을 맡아 주차장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학교 부담을 줄였다.

더불어 주차장을 공유한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학교 노후시설 개선, 수목 관리, 학생 놀이터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학교 주차장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도심 속 고질민원이었던 주차난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 1면 조성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 주차장 공유로 약 4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교육청은 하반기에는 동구와 학교 주차장 추가 개방을 논의하는 등 공유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 공유는 교육기관이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한 좋은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지역민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송편 빚기 광주 북구 자원봉사 캠프지기와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아이들이 10일 오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추석 맛이 송편 나눔 행사’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송편을 빚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영배 기자**

광주·전남 청년 공무원 이탈 상승세... “대책 마련해야”

재직기간 3년 미만 퇴직자 급증
박정현 의원 “근본적 대책 필요”

광주·전남지역 MZ세대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공직을 떠나 면직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대덕구)이 인사혁신처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면직하는 20대와 30대 지방직 공무원은 2020년 41명, 2021년 63명, 2022년 74명, 2023년 7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광주본부, 추석 특별수송 대책본부 운영

13~18일... 선로 등 안전점검

코레일 광주본부는 13일부터 18일까지를 추석 특별수송기간으로 지정해 귀성·귀경객들을 위한 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본부는 안전한 철도수송을 위해 선로, 전차선 등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

검을 완료했고, 특히 열차 내 화장실, 의자, 출입문 등 고객이용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정비를 마쳤다.

또 승객들이 안심하고 역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확인과 승강설비 기능을 점검함과 더불어 역사 대청소를 시행하는 등 고객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 2020년 203명, 2021년 265명, 2022년 260명, 2023년 244명으로 광주보다 더 많은 청년 공무원이 스스로 면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청년 공무원 이탈 현상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전체 공무원 중 2019년 4099명에서 2023년 8773명으로 5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기간 임기가 정해진 직종의 퇴직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청년 공무원들이 힘들게 합격했음에도 스스로 면직하는 주요 원인으로 ‘경직된 조직문화’, ‘약

성 민원’, ‘불리한 보수 체계’ 등 다양한 사유가 이유로 꼽힌다.

뒤늦게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3% 인상하고 ‘긴급 직무 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대책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공무원 이탈 흐름을 본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정현 의원은 “일선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으나 개선 기미는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라는 위기의식 아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윤준명 기자

전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만족도 높인다

어제 순천매산고 현장 방문

전남도교육청이 만족도가 높은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현장 찾아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아침 간편식 사업을 1년째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호응 속에 올해는 작년보다 42개교가 늘어난 103개교에 아침 간편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일 순천매산고를 방문해 아침 간편식 사업 추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교육수요자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의견 청취 현장에 참석한 한 교직원은 “간편식을 제공한 후 늦게 등교하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빨라졌고, 아침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



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며 “더 많은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상반기 아침 간편식 설문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평균 89%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해야 한다. 하반기에 간편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아침 간편식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